

성노예 및 인신매매의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며

이차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과 이차대전중에 일본제국군은 “위안소”라는 이름의 군인전용 사창가 시스템을 전투지역 부근에 세웠습니다. 여성들과 13세밖에 안된 어린이들까지도 일본군 및 그 하수인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납치되어 강제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Historians)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부분이 조선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군대전용 사창가로 인신매매된 여성 및 소녀들의 숫자는 최대 20만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및 소녀들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 “위안부”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시 성노예는 존재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존재하지만, 인신매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정부가 관여했던 일본 제국군의 역할에 대해, 전후 일본은 지금까지도 깨끗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던 요헤이 고노는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위안부’의 이동에 관여했다”고 담화(**고노담화 Kono Statement**)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노담화는 (1) 일본 총리가 공식적인 총리자격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2) 저질러진 범죄의 전체 규모에 대해 빠짐없이 인정한 것도 아니며, (3) “위안부” 생존자 및 가족들에게 정부차원의 배상을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정부는 과거 전쟁범죄 역사의 장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군이 성노예를 목적으로 정부가 인가한 체계적인 인신매매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유엔**(UN) 뿐 아니라 역사학자 및 국제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다양한 증거와 확인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 아베신조는 “위안부” 역사를 미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그의 정당은 **일본**(Japan)과 **전 세계**(around the world)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베 행정부는 **일본 신문사**(Japanese newspapers)에 압력을 가하여 이 주제를 다룬 기사를 철회하도록 하는가 하면, “위안부”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추모비**(memorials)를 없애고 공식 문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외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총리가 속한 집권당 멤버들은, 특히 성노예와 같은 이차대전 중 저질러진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명예와 국가적 자부심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명예란, 인권침해를 저지른 그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하면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부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안부” 생존자들의 숫자는 원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80대와 90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이며 명확한 사죄를 받기 위해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과 소녀들이 일본 제국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심신에 대한 학대를 당하고, 정부가 조직한 성노예 시스템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도 그들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의(Justice)는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아베신조 총리와 일본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기 위해 서명해 주세요: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신문, 역사기록물 및 공식적인 유엔(UN) 및 다른 정부 문서(government documents)에서 “위안부” 역사에 대한 언급을 수정, 삭제,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노력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제국군이 이차대전중 군대의 “위안소”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을 성적 노예로 삼기 위해 체계적인 인신매매를 저지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생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며, 이 조직화된 성노예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라.